

목차

01 연구개요	2
1_연구배경 및 목적	2
2_연구내용 및 방법	2
02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모색 I : 자치분권	6
1_개요	6
2_주제 발표	18
3_주요 토론내용	73
03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모색 II : 지방재정	88
1_개요	88
2_주제 발표	89
3_주요 토론내용	125
04 지방의회의 분권 및 활성화 방안	142
1_개요	142
2_주제 발표	144
3_주요 토론내용	187
05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교류 및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	202
1_개요	202
2_주제 발표	204
3_주요 토론내용	229

06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	244
1_개요	244
2_주제 발표	248
3_주요 토론내용	323
07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당위성과 방향	334
1_개요	334
2_주제 발표	339
3_주요 토론내용	386
08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	398
1_개요	398
2_주제 발표	400
3_주요 토론내용	422
09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재정부담 개선방안	432
1_개요	432
2_주제 발표	434
3_주요 토론내용	490
10 지역상생발전 민관협력 방안	500
1_개요	500
2_주제 발표	501
3_주요 토론내용	517
11 국가 및 지방재정의 미래전망과 대응방안	524
1_개요	524
2_주제 발표	526
3_주요 토론내용	550
Abstract	563

표

[표 1-1] 자치분권 상생발전 기획시리즈	3
[표 2-1]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모색 I: 자치분권	6
[표 2-2]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주요 내용	28
[표 2-3]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평가	29
[표 2-4] 국가 지방 간 기능배분	36
[표 2-5]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의 필요성	37
[표 2-6]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증가 추세	54
[표 2-7] 연방보조금 추세	56
[표 2-8] 연방-주정부의 재정적 관계, 1964-2004	57
[표 2-9] 미국의 연방선점권(preemption) 제정 추세	61
[표 2-10] 강제적 정책도구의 영향에 관한 질문	62
[표 2-11] 강제적 정책도구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	62
[표 3-1] 프로그램 순서	88
[표 3-2] 연도별 지방세입 항목별 구성 추이	91
[표 3-3] 도별 지방재정자립도 추이	92
[표 3-4] 지방재정자립도 현황(2015년 기준)	92
[표 3-5]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현황	93
[표 3-6] 중앙과 지방 간 사회복지비 부담 추이(당초예산 순계기준)	96
[표 3-7]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과 사회복지비 증가율	97
[표 3-8] 연도별 지방채무 변동추이	98
[표 3-9] 지방세 세목별 탄력세율제도 및 적용 현황	100
[표 3-10]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건 차이 비교(2013년 결산 기준)	102
[표 3-11]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 추이	108

[표 4-1] 지방의회의 분권 및 활성화 방안	142
[표 4-2] 대도시지역 광역행정체제의 장점과 단점	158
[표 4-3] 100만 이상 대도시의 국제비교	159
[표 4-4] 지방의회의 종합평가	170
[표 4-5] 도·도·부·현의회 사무국 직원 현황	174
[표 4-6] 정·촌의회의 사무직원 현황	174
[표 5-1] 지역교류 및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	202
[표 5-2] 2015 지역상생발전 종합 마스터플랜(안)	206
[표 5-3] 국내외 사례 개요	208
[표 5-4] 도농교류의 개념에 대한 정의	216
[표 5-5] 도농교류의 주체와 대상	216
[표 6-1]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	244
[표 6-2] 서울시 기능별 세출 예산 총괄표	282
[표 6-3] 표준 행정수요의 측정항목 비교	285
[표 6-4] 행정수요 측정항목 분류	286
[표 6-5] 서울시 자치구 측정단위 타당성 분석 결과	289
[표 6-6] 지방의회비 측정단위 회귀분석 결과	290
[표 6-7] 일반관리비 측정단위 회귀분석 결과	291
[표 6-8] 일반관리비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교	291
[표 6-9] 안전관리비 측정단위 회귀분석 결과	292
[표 6-10] 안전관리비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교	292
[표 6-11] 교육지원비 측정단위 회귀분석 결과	293
[표 6-12] 문화체육비 측정단위 회귀분석 결과	293
[표 6-13] 환경보호비 측정단위 회귀분석 결과	294
[표 6-14] 환경보호비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교	294
[표 6-15] 일반복지비 측정단위 회귀분석 결과	295
[표 6-16] 기초생활비 측정단위 회귀분석 결과	296

[표 6-17] 보육사업비 측정단위 회귀분석 결과	296
[표 6-18] 노인복지비 측정단위 회귀분석 결과	297
[표 6-19] 아동복지비 측정단위 회귀분석 결과	297
[표 6-20] 장애인복지비 측정단위 회귀분석 결과	298
[표 6-21] 보건위생비 측정단위 회귀분석 결과	298
[표 6-22] 산업경제비 측정단위 회귀분석 결과	299
[표 6-23] 도로관리비 측정단위 회귀분석 결과	300
[표 6-24] 도로관리비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교	300
[표 6-25] 교통관리비 측정단위 회귀분석 결과	301
[표 6-26] 지역개발비 측정단위 회귀분석 결과	302
[표 6-27] 지역개발비 다중회귀분석 결과 비교	302
[표 6-28] 인건비 측정단위 회귀분석 결과	303
[표 6-29] 변경안 측정항목별 단위비용과 고정비용 추정 결과	303
[표 6-30]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규정	304
[표 6-31] 측정항목별 기준재정수요액의 변화	306
[표 6-32] 기준재정수입액 항목 구성	308
[표 6-33] 개선 전·후 재정부족액 현황	314
[표 6-34]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% 수준 조정교부금 교부율 산정	315
[표 6-35]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	315
[표 6-36] 맞춤형 급여를 특별수요로 반영한 결과	316
[표 6-37] 맞춤형 급여 보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배분액 변화	317
[표 6-38] 일반관리비, 맞춤형 급여를 특별수요로 반영한 결과	319
[표 6-39] 일반관리비 보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배분액 변화	319
[표 6-40] 안전관리비, 환경보호비를 특별수요로 반영한 결과	321
[표 6-41] 안전관리비, 환경보호비 보정에 따른 조정교부금 배분액 변화	321
[표 7-1]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당위성과 방향	334
[표 7-2] 지방분권형 헌법의 원칙	345

[표 7-3] 전면개정안의 네 가지 방향	357
[표 7-4] 전면개정안 주요 내용	366
[표 8-1]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	398
[표 8-2] 주요 선진국 지방자치단체(지방정부)의 계층 구조	403
[표 8-3] 미국 상위 25개 대도시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	405
[표 8-4] 일본 지방자치법상 행정기관의 분류	414
[표 8-5] 동경도 집행기관 구성 사례	415
[표 8-6] 지방분권 보장에 따른 기관구성 및 운영 다양화 관련 헌법내용	416
[표 9-1]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재정부담 개선방안	432
[표 9-2] 서울특별시 본청 및 자치구 세입추이	464
[표 9-3] 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세입추이	466
[표 9-4] 서울특별시 본청 일반회계 세출 현황	467
[표 9-5] 서울특별시 자치구 일반회계 세출 현황	468
[표 9-6] 광역시 본청 일반회계 세출 현황	469
[표 9-7] 광역시 자치구 세출 현황	470
[표 9-8] 특·광역시 자치구 5대 사회복지 부담 증가	471
[표 9-9] 특별시·광역시 자치구 기초노령연금 증가 추이	472
[표 9-10] 특별시·광역시 자치구 장애인연금 현황	473
[표 9-11] 특별시·광역시 자치구 영유아보육료 현황	474
[표 9-12] 특별시·광역시 자치구 가정양육수당 현황	475
[표 9-13] 특별시·광역시 자치구 기초생활보장급여 현황	476
[표 9-14] 특별·광역시세 대비 자치구세 비중	477
[표 9-15] 조정교부금 산정내역 및 조정률(2014년)	477
[표 9-16] 서울시 조정 교부율(기준) 및 재원 변화	478
[표 9-17] 2013년 지방재정 대책 순증효과 추정(기획재정부 자료 기준)	479
[표 9-18] 정책변화에 따른 2015년 재원 증가 추계액	480
[표 9-19] 조정률 산식을 대상으로 한 재정불평등 측정 결과(2015년)	482

[표 9-20] 현행 산정방식 적용 시 조정교부금 확충 규모	484
[표 9-21] 주요 복지사업 자치구 재원분담비율 사례	485
[표 9-22]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의 분권교부세액	486
[표 9-23] 지방소득세 공동세 방안의 재정효과(2014년)	488
[표 9-24] 담배소비세 이양 방안의 재정효과(2014년)	488
[표 10-1] 지역상생발전 민관협력 방안	500
[표 11-1] 국가 및 지방재정의 미래전망과 대응방안	524



그림

[그림 2-1] UMRA 핵심요소	65
[그림 4-1] 대도시지역 광역행정 유형	157
[그림 5-1] 완주군 유통연계의 협력 네트워크	211
[그림 5-2] 도농교류 개념도	225
[그림 6-1] 합동최소자승법(Pooled OLS)에 의한 선형회귀모형의 추정	280
[그림 6-2] 표본회귀선의 정규방정식	281
[그림 6-3] 측정단위 선정과정	288
[그림 6-4] 서울시 자치구, 광역시 자치구 사회복지 예산 추이	310
[그림 6-5] 서울시 자치구, 광역시 자치구 세출예산	312
[그림 6-6] 자치구 사회복지비, 일반관리비 구비 비중 변화	318
[그림 6-7] 자치구 안전관리비, 환경보호비 구비 비중 변화	320
[그림 7-1]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범위	346
[그림 7-2] 헌법 전문 개정안	347
[그림 7-3] 헌법 제1조 개정안	348
[그림 7-4] 헌법 제4조 개정안	348
[그림 7-5] 자치권 신설안	349
[그림 7-6] 공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의 교직구조	350
[그림 7-7] 현행 헌법과 전면개정안 목차 비교	350
[그림 7-8] 입법권, 행정권, 사법권의 행사방식	353
[그림 7-9] 입법권의 지방분권화	354
[그림 7-10] 행정권의 지방분권화	355
[그림 7-11] 조세권의 지방분권화	356
[그림 7-12] 재정권의 지방분권화	356

[그림 7-13] 사법권의 기능적 분권화	357
[그림 7-14] 지방분권형 양원제 도입안	361
[그림 7-15] 양원제 국회의 구성	362
[그림 7-16] 참의원의 권한	363
[그림 7-17] 참의원 구성 시뮬레이션	364
[그림 7-18] 자치분권평의회	365
[그림 7-19] 헌법기관 구성 권한의 지방분권화	365
[그림 7-20] 지방자치단체 등의 헌법기관화	366
[그림 7-21] 자주입법권 확대	367
[그림 7-22] 선거관리 관련 조항의 개선	369
[그림 7-23] 직접 민주제의 도입(국민발안과 국민소환)	370
[그림 7-24] 헌법 개정 절차의 이원화	372
[그림 7-25] 원포인트 개정안 비교	373
[그림 8-1] OECD에서 대한민국 지방분권 수준	404

